



전주매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4일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 제1공장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허성범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 대표 등 참석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캐나다 첨단 배터리 기술, 김제 안착

도-김제시-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 893억 투자 협약
드론·방산용 차세대 배터리 생산기지 조성, 지역경제 활력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4일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 제1공장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드론·방산용 배터리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협력에 본격 나선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해외 유망 기술기업을 유치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는 김제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드론과 방산 분야에 쓰이는 고에너지·고출력 배터리를 개발·양산하고, 북미와 유럽 등 세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89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라인 고도화와 전문인력 채용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제 거점의 연간 전극 1.5GWh, 배터리 셀 1GWh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

아울러 실리콘 음극 기술을 토대로 리튬메탈 배터리와 무음극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플랫폼으로 개발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제는 미래 배터리 기술개발과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유치가 단순한 생산 시설 확보를 넘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기능까지 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드론과 방산 영역에서 고성능 배터리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김제에서 연구개발부터 생

산, 시험평가,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면 전북의 첨단 제조 역량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미래차와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RE100 기반 첨단산업을 축으로 글로벌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신속한 행정지원,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기존 이차전지 산업에 드론·방산 배터리 분야까지 더해 산업 지평을 넓히고,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허성범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주) 대표는 "김제는 우수한 산업입지와 제조 기반을 갖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과 양산의 최적지"라며 "김제에서 생산한 첨단 배터리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어가고,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김제가 차세대 배터리와 드론·방산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방산용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함께 잘사는 김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투자는 전북이 글로벌 첨단 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생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세계시장을 향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는 캐나다 NEO Battery Materials Ltd.의 한국법인으로, 실리콘 음극 기반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에 도내 첫 폭염 중대경보 발효

도, 최고단계 대응 나섰다

취약계층 보호·농업·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대응 총력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집중 홍보… 도민 실천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내 최초로 전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폭염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시·군과 관계기관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을 긴급 전파했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단계의 폭염 대응체계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도는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과 농업·산업현장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홀몸어르신 등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안전확인 등 확대하고, 노숙인에 대해서도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현장 예찰과 안전확인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낮 시간대 농작업 중지 및 충분한 휴식을 적극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활용한 현장 예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 준수 여부

를 집중 점검하고, 긴급조치를 제외한 야외작업은 중지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야외 공연과 축제는 일정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폭염 중대경보 시 도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집중 홍보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동수칙은 △모든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중단(Stop)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Move) △가죽과 이뿔, 차양 내부에 방치된 사람을 확인하는 확인(Check)으로, 폭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행동요령이다.

아울러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이는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특히 어르신과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12월 17일부터 시행… 조례 개정 등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전주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60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4년 시행된 특별조치법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시역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언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해 대상 시민들이 시행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북청장 "현장 미흡시 전북청 수사"

"수사권 오남용 없을 것"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사진)이 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권한이타기보다는 책무로서 무게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서나 현장에서 미흡

"경찰이 이 수사권을 감당할 역량이 되느냐 그리고 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냐 같은 역량과 오남용 문제가 국민들이

한 수사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전북청으로 사건을 끌고와서 직접 수사하는 것을 강화하려고 한다. 도경(전북청) 중심 수사체제를 앞으로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오남용 방지에 대해선 내·외부 통제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내부 비리 수사로 활성화하고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보

완수사임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은 앞으로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경찰이 일차적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며 앞서 수사한 기관에 보완수사를 하라는 요구만 가능하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이 청장은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높아진 만큼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 조직을 구성하고 커진 수사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